학원장 "내가 입열면 모두 다쳐"

學院단속 봉변 직원 國監場 증언

"꼬박꼬박 돈 바쳤는데 왜 왔나"

교육청 간부회의뒤 고발 철회

7일 서울강동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에는 지난달8일 관내 고액불법과외 학원을 단속하다 학원장에게 봉변을 당한 강동교육청 서기 李宰亨씨(29)가 자진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李씨는 단속반 동료였던 金양주씨를 폭행하고 가스총까지 들이대며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金正基배영어학원장의 교육청 고위층과의 밀착관계를 암시하는듯한 협박발언을 공개했다.

李씨는 또 사건발생 직후 金원장이 강동교육청을 다녀간 뒤 金원장에 대한 고발을 유보하는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인 강동교육청 간부들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다음은 李씨의 증언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

지난달 8일 동료 단속반원 金씨와 합께 문제의 배영어학원을 찾아갔다. 불법과외 학원이란는 사실을 알고 학원장 李씨 일행은 관리인의 안내로 金원장실로 들어갔다.

金원장은 李씨등의 방문 목적을 묻고뒤 불쾌한 표정으로 곧 강동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申吉雨과장(구속)에게 전화를 걸었다.

金원장은 『우리 학원을 지명해 단속반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따진뒤 수화기를 놓고 책상서랍에서 가스총을 꺼내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金원장은 『강동교육청 고위간부들에게 매월 3백만~4백만원씩 상납했는데 왜 하급공무원이 단속을 나왔느냐』며 『내가 이사실을 언론에 폭로하면 교육장이하 말단 직원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료 金씨를 폭행했다.

봉변을 당한 李씨는 金씨를 병원에 입원시킨뒤 다음날 申과장과 담당국장등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강동교육청 간부들은 9일 간부회의에서 金원장을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10일 金원장이 교육청을 찾아오고난 뒤부터 행정처분쪽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金원장에 대한 고발 유보방침과 함께 교육청 내에서는 고위간부들이 金원장으로부터 「양심선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申과장은 李씨를 불러 『내심정같아서는 고발하고 싶지만 金원장이 폭로하겠다는 명단에 교육장 이름도 들어가 있어서…』라고 말했고 孔모 교육장도 李씨를 불러 『그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라며 난감해 했다.

교육청서기생활 4년째인 李씨는 이날 증언을 마치며 『그동안 일을 당하고 보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尹永燦)

學院등록증 전매 실태

브로커가 교육구청 역할 代行

기존 운영자 인가증 입수 웃돈얹어 팔아
일부공무원 脫法알면서 뇌물받고 묵인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비입시계학원 등록증의 탈법적인 전매행위의 성행은 학원설립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난립방지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학원신설을 억제하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학원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학원등록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악용, 학원브로커들이 학원운영을 포기한 기존의 학원경영자들로부터 시들인 등록증에 웃돈을 얹어 학원을 운영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전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학원브로커 업체는 Y교육회 J학원정보 D교육센터 등 10여곳.

이들은 속셈 주산학원등 비입시계 학원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은 1천만원선에, 강북지역은 7백만~8백만원에 등록증을 팔고 있다.

본사취재진이 브로커 李모씨(38)에게 학원설립을 문의하자 李씨는 『학원을 할 장소가 어디냐』며 서울시 9개 교육구청산하의 학원등록증 20여장을 보여줬다. 그는 이어 『강남에서 외국어학원 등록증으로 입시학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외국어학원 등록증을 5천만원에 살 것을 권유했다.

또다른 브로커는 등록증 매매외에도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는 등의 학원장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소개해주고 6개월간 학원을 대신 운영해주겠다』며 월 3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등록증 전매에 의한 학원설립신고를 받을때 정상적인 학원설립자 변경인지 탈법적인 등록증 매매인지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다는 것이 브로커들의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학원 등록증 매매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상납받기도 한다는 것.

일부 악덕브로커들은 등록증을 팔아넘길때 학원설립을 하려는 「고객」을 해당 학원에 데려가 원생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 물론 이때의 북적거리는 학원모습은 브로커와 학원측이 사전에 연출해놓은 것으로 멋모르고 학원등록증과 함께 기존 학원을 사들여 운영을 하려다 도산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학원업계의 얘기다.

서울동작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탈법적인 학원등록증 전매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학원관련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점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학원의 설립 또는 운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炳奇)